

2020년 도 제2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0년 9월 24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 지 원 위 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정 규 일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신 윤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4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1) 관련부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설정하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30조원에서 5조원 증액한 35조원으로,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2.5조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1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5.5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한도 유보

분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5.1조원에서 5조원 증액한 10.1조원으로 하되, 2021년 12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을 0.1조원으로, 총 한도를 25조원으로 각각 환원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국내외 수요 감소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가운데 수출기업 및 설비투자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운용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계속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운용기한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9월 10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모든 위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보다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동일하게 한도 유보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의 운용기한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동일하게 2021년 3월말로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인 만큼 한도 유보분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일부 위원은 설비투자 지원 확대의 취지가 무엇인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설비투자 지원 확대가 코로나19 이후 자동화 투자 증가, 신사업 진출에 따른 새로운 설비 도입 등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유념하여 당행의 자금지원이 중소

기업 자금사정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20년 10월 5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35조원에서 8조원 증액한 43조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1조원에서 2조원 증액한 13조원으로 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한도 유보분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현재의 10.1조원에서 6조원 증액한 16.1조원으로 하되, 2022년 6월 1일부터는 0.1조원으로 한다.

나. 보고안건

<보고 제61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61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9월 17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적절히 분석하였고 내용도 충실하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조치로 현재화되지 않은 잠재리스크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여러 위원들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신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먼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총량뿐 아니라 부채상환능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명목 GDP 대비 비율 외에 소득, 금융 및 실물자산 구성, 부채의 만기구조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최근 민간의 레버리지(leverage) 비율 상승은 명목 GDP의 감소에도 기인하므로,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는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아울러 여러 위원들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전반의 평균적인 재무건전성에 대해 평가함과 아울러 미시정보를 활용하여 개별기업의 유동성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더 어려워 보이므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재무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한편 여러 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정책이 종료될 경우 가려져 있던 부실이 드러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이 비은행보다 적극적으로 신용공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위기대응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및 자산구조 변화가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

무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2020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을 유지.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등으로 금융·실물 괴리 우려가 커지는 등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잠재리스크는 다소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4월 중(23.9) 위기 단계에 진입하였다가 5월 이후 점차 하락(8월 13.5, 잠정치)하면서 주의단계(8~22)에 머물고 있음.

다만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동 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

저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과 함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민간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

1.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가. 신용시장

가계신용은 지난해 말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신용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 확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연체율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다소 악화.

나. 자산시장

자산시장의 경우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용경계감 증대로 크게 확대되었다가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최근 우량물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주가는 3월 중 급락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전고점을 회복.

주택가격은 상반기 중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8월 들어서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익성은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다소 저하.

라. 자본유출입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출되었으나, 7월 이후에는 채권자금의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자금 유출 규모는 축소.

2.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강건한 상태를 유지.

다만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등으로 가게 및 기업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손실흡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규모, 한·미 통화스왑계약 연장(20.7.30일)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